

漁港開發은 先進水產國 발돋움 위한 先決課題



金景澈
〈中央日報 논설위원〉

현안과제의 하나인 산업간 불균형문제에서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도 많고 주장도 무성하지만 수산문제는 전면에 부각이 잘 안된다.

산업인구의 분포에서 볼때 농업인구보다는 수산인구가 적은 탓도 있으나, 정책당국의 수산업에 대한 기본 인식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우리는 어차피 자원빈곤으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개발·이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의미에서 농업기반 확충은 물론, 수산자원 개발 등 자연이용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경제개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같은 노력이 균형을 잃고 특정부문에는 집중되지만, 또 다른 부문에는 소홀하다. 그결과는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비록 원양어선들이 5대양을 누비기는 하지만, 공업·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에 해당한다.

어항을 보면 우리 수산업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항이라면 수산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어업기반시설에 해당하며 어항없는 수산업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항시설은 취약하기 이를테 없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그동안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어항은 개발과 유지·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어업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어항은 있을만한 곳이면 연안선 어디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어선의 안전정박, 출어준비, 어획물의 하역처리, 어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해서는 어항시설의 완비가 불가결하다.

우리실정은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수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선총길이 1만2천8백km의 연안에 모두 1천9백41개의 어항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어항다운 어항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수산청에 따르면 수산청지정관리의 1·3종 어항은 61개, 도지사 가지정관리하는 2종 어항은 3백25개 밖에 안된다. 나머지 1천5백55개 어항은 어항법과 무관한 어촌부락단위의 지역주민편의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군소·소규모 어항이니 우리의 어항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도 명백하다.

정부에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정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어항개발에 연평균 14억원씩 투자했고, 그후 81년까지 10년간은 3백46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사실상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5차경제개발계획때인 82~86년때이다.

이 기간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1천7백47억원을 투자했기에 어항이 이정도라도 된것이다. 일본의 87년 한 해 어항투자실적 1천7백억엔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일본은 수축·개량사업에만 이정도의 투자를 한점에서 볼 때 더욱 대조적이다.

정부는 6차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1년까지 3천2백62억원을 어항개발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완벽한 어항시설의 필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항개발은 선진수산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점을 명심하여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당부한다.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항 개발로 접근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66만 어민들의 소득수준·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하겠다.